

국제 환경안보와 동북아 국가들의 한계

최 병 두*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limita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Byung-Doo Choi*

요약 :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주요어 : 환경안보, 환경레짐, 환경거버넌스, 동북아 환경문제, 현실주의적 정치, 신자유주의적 정치, 동북아시아 환경문제

Abstract : This paper considers critically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to explore some limitations which seem to have made difficult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cently emerging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has turned the traditional or realistic meaning of security to the neo-liberal and the political-economic one. On the basis of a reconsideration of these newly developed meanings of security, this paper has reviewed critically some works which have focused on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regime and of environmental governance. To formulate a true environmental governanc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nd a practical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conomic structure of labour division, the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opposition in the region, and the immaturity and exclusiveness of civil consciousness can be pointed out as some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be construct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 true environmental security in this region requires formation of reciprocal economic relationship, develop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for political trust among countries, and improvement of interaction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Key Words: environmental security, environmental regime, environmental governance, realistic politics, neo-liberal politics, environmental problems of North-East Asia

1. 서론

지난 몇 십년간 남·북한과 일본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정치·경

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해체와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은 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군사적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isty) bdchoi@daegu.ac.kr

발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이 지역 국가들 간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근거했던 안보체제는 점차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경제적 경쟁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이로 인해 유발되는 새로운 긴장과 갈등 관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기보다는 경제우선정책에 따라 일단 잠재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추진은 경제적 경쟁관계의 심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 문제들, 특히 자원의 생산과 국제적 배분 및 환경오염의 국제적 확산 문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에 따른 새로운 안보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부각되었으며, 이는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 및 이 과정에서 초래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세계자유무역체제 속에서 경제관계를 내포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만들고 있는 세계화 과정은 각 국가 및 지역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다자간 협약을 통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행위자로서 초국적기업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은 국가 및 지역간 경쟁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주권(자원·환경적 주권을 포함하여)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의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환경관련 제도들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또 다시 국가 내 및 국가간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지역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원·환경문제의 점진적 심화로 인해 초래된 이른바 '환경안보'는 현실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서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환경안보의 개념화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은 각 국가의 정책입안가들이나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때로 서로 다른 견해들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국제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과 관련된 접근 방법들의 유형화 및 각 유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구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환경안보의 개념을 그 자체적으로 정의·재검토해 보고, 그 다음으로 환경안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문제시하여 이를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각각 환경레짐 및 환경거버넌스의 개념과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적 고찰을 배경으로 동북아시아 환경안보를 위한 새로운 체제, 즉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정치경제 및 시민사회의 조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환경안보 개념의 유의성과 재검토

1) 환경안보의 개념과 그 유의성

오늘날 자원·환경문제의 심화와 전지구적 확산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봉착한 환경위기는 개별 국민국가의 일방적 행위 및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지배와 통제로는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국가가 환경적 위협에 따른 개인의 불안전을 막아 주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당면한 환경위험은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구상하도록 했다. 즉 기존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군사적 수단을 통한 통제 또는 규제라는 점에서 인식되던 안보의 개념은 한편으로 인간 중심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환경위기에 따른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국제 또는 세계) 환경안보의 개념이 등장하도록 했다¹⁾.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

가들 간 관계에도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Dupont, 1998; Haque, 2001 등 참조).

환경안보의 개념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이 개념을 보다 정형화하고, 또한 이를 적용하여 현실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안보의 개념적 유의성이 한편으로 강조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환경안보를 정의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은 체계적으로 정립된 분석틀이나 정책 제안을 제공하기 보다는 개념적, 정책적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했다(Lee, 2002). 이러한 혼돈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초래되었다. 예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안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안보의 개념은 외적 위협으로부터 주권 국가의 물리적 안전으로 좁게 정의되지만, 새로운 안보(security)의 개념은 정신적 행복, 생태적 조화 또는 시장의 안정성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매우 모호한 것처럼 보인다²⁾. 이러한 개념적 혼돈과 정책적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을 기존의(전통적) 안보 개념과 비교하면서 그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자원·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안보란 “국민생활에서 자원의 적정 이용과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저해하고 나아가 자원·환경과 관련된 영토 및 주권의 보존을 침해하는 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나 방어와 관련”된다(최병두, 1995). 즉, 환경안보란 “환경적 위협 및 환경적 기원을 가진 위협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보호”로 규정하고, “환경문제가 특정 국가에게 이를 다루기 위하여 비상한 방식들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게 될 때, 환경은 안보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다(Lee, 2002). 사실 자원의 침탈 또는 이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지적 또는 세계적 영토 분쟁은 정치지리학 또는 지정학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³⁾.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원·환경문제와 안보문제 간의 관계는 자원문제를 둘러싸고 영토와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군사력의 동원이나 대립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들의 지리적 이동

으로 인한 인접국가의 환경오염이나 국민생활의 침해, 또는 오존층의 파괴나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환경의 파괴 및 인류생존의 위협을 새로운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환경의 안보문제는 때로(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력의 동원을 초래할 수 있지만, 환경안보와 관련된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은 기본적으로 탈(또는 비)군사적이다. 또한 이러한 안보는 자원의 개발·이용 및 환경의 유지·보존과 관련된 영토의 방어나 주권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이들에 우선하여 국민의 생존과 생활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환경안보의 개념적 유의성이 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자원·환경안보의 개념은 개별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간 국제환경안보 및 세계환경안보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안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안보 차원을 능가하는 ‘공동(또는 집단)안보’ 또는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최병두, 1995). 왜냐하면, 오늘날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국가의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환경안보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제기된 안보의 개념을 환경안보의 차원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안보의 개념을 적용하면, 환경안보란 국민국가의 안보 틀 내에서 내적 및 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적 위협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 안보의 개념에 따르면, 환경위협은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며 국민국가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안보란 국가적 수준보다는 국제적, 지구적 범위에서 공동적으로 협력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전자는 국제정치에 관한 현실주의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상률, 1998, 또한 Deudney, 1990; Imber, 1994 참조). 이러한 국가안보와 지구안보의 두 차원은 표 1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위의 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환경안보의 개념은 그 자체적으로 개별 국민국가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국제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표 1. 국가안보와 세계안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세계안보(global habitability)
명확한 위협	불명확한 위협
타자(others)로서의 적 의도된 해악	우리 자신(ourselves)으로서의 적 의도되지 않은 해악
단기적 범위	장기적 범위
주로 영합적(zero-sum) 전략	공동이익 전략
전통적 현실주의의 관점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관점

자료: Deudney, 1990, 464-466; Imber, 1994, 11; 정상률, 1998에서 재인용 및 수정.

안보의 개념은 어떤 딜레마를 내재하게 된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개별 국민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적 이해관계에 무관심할 정도로 느슨하게 해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안보를 위한 지구적 주권(global-sovereignty)의 개념이 지배적 담론으로 부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제환경안보전략(특히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은 때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안보전략과 갈등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안보는 이들의 독점적 보유와 배타적 이용과 흔히 관련되지만,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지구적 규모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환경안보는 개별 국가의 자원·환경의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안보의 개념은 3가지 차원, 즉 국지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세계적(국제적) 차원에 모두 적용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환경안보의 개념화에 있어 3가지 범주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Haque, 2001). 우선 세계적 차원에서 환경안보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퇴락의 여러 형태들을 강조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안보는 인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을 유발하는 국가적 환경 위협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국지적 환경안보는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이나 국지적 지역의 방어 또는 환경적 손상으로부터 치유, 그의 자원·환경문제로부터 공공적 안전의 보장에 관심을 둔다. 나아가 이러한 3가지 차원의 환경안보 개념은 3가지 상이한 이념(이론 또는 이데올로기)과 관련된다고 제시된다. 즉 현실주의자는 국가주권을, 생

태중심주의자는 지구적 주권 내지는 지방적 소공동체 주권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가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국가주권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환경안보의 개념은 분석적으로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념 또는 분석틀(접근방식)의 상이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환경안보는 국지적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 세계적 차원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개방된 상호작용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은 한편으로 세계화 과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지만 또한 그 발생의 장소는 국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점으로,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은 공간적 또는 지리학적 함의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통적 의미(특히 지정학적 의미)에서 안보란 공간적 실행의 개념이었지만, 이러한 개념의 전환으로 새로운 안보는 더 이상 공간적 함의를 내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영토나 생태적 영토의 경계는 정치군사적 영토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초국적자본의 세계에서 국가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될 수 있으며, 공해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생태적 안보에 대한 호소는 지리적인 범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환경운동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지구자원탐사는 국가영토와 관련된 공간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에 있어 공간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간은 어떤 영역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자원은 여전히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교역을 위한 공간적 이동이 불가피하고,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지적인 발생원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이다.4)

물론 환경안보의 개념이 국지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중층적 공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즉 여기서 지역이란 국가들

간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지표상의 지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호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외부성을 가지는 일단의 국가들 간에 '지역안보복합체론'(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이 제시될 수 있다 (Lee, 2002).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환경안보복합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위협이 단지 지역생태계의 수준에서만 인지되는 '잠재적' 지역환경안보복합체;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각 국가들의 환경안보위험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이해관계 체계의 균형'으로서 지역환경안보복합체; 셋째 국가들이 환경안보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지역적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 '지역 레짐'으로서의 지역환경안보복합체; 넷째 지역적 환경안보문제가 국가들 간에 그들 자신의 공동된 문제라고 상호주관적으로 간주되는 '지역적 상호주관적 공동체' 등이다. 이러한 지역환경안보복합체의 유형화는 현실 지역환경안보체계의 구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발전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³⁾.

2) 환경안보 개념의 재검토

환경안보의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의 모호성을 강조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되거나 심지어 '환경안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할 것을 제안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한다. 예로, "환경안보에 관한 담론은 결과적으로 불확실하며, 때로 모순적이고 혼란적인 은유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주장된다 (Dyer, 1996, 25).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정확히 무엇이 위협에 처해 있으며 무엇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환경안보라는 개념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위협과 갈등이라기보다는 세계전체 인류의 안보 또는 인간의 사회적 (그리고 생물적) 존재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모호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환경안보의 개념은 국가 중심적이며, 힘 특히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기존 안보 개념을 대체하고자 하지만, 누구를 (또는 무엇을) 위한 안보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안보가 달성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고 비판된다 (Deudney, 1997 등 참조). 나아가 환경안보라는 개념

은 이데올로기적 수사라고 비난되기도 한다. 즉 "안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적이고 안뜰이다. 환경안보라는 개념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안보란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 대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립적 국면을 녹색화하고자 하는 전략에 불과하다"(Litfin, 1999).

환경안보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전자의 비판은 환경안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안보는 어떠한 환경적 위협 상황을 전제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환경안보 개념의 한계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조하는 후자의 비판은 기존의 안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안보의 개념이 여전히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전자의 비판에서 환경안보가 가시화되는 환경적 위협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환경안보의 개념을 대신하기 위한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의 비판과 관련하여, 3가지 측면 즉 환경안보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자원의 희소성 문제, 환경적 위협에 직면한 환경안보의 대상 문제, 그리고 환경안보가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 위협의 정도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환경안보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환경갈등이나 환경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의 설정, 즉 환경자원의 희소성과 관련된다. 이에 초점을 두고 환경안보를 논하는 학자들(예로, Homer-Dixon, 1999)에 의하면, 환경자원의 희소성은 3가지 상호관련된 요소들의 문제, 즉, 공급-유발적 희소성, 수요-유발적 희소성, 구조적 희소성 등으로 이해된다. 첫째, 재생가능한 자원이 퇴락하거나 고갈될 상황에 있을 때, 이 자원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 둘째, 1인당 소비가 일정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한다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구조적 희소성은 상충부가 자원의 더 많은 부분을 획득함으로써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상호관련적으로 발생한다. 즉 한편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유층이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는 상황이 환경안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⁶⁾.

사실, 자원·환경문제와 안보 간의 관계는 일단 이 문제에 내포된 어떤 고유한 특성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병두, 1995). 즉 자원과 환경은 모든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그 절대적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일단 파괴·오염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의 확보와 환경의 보존은 민감한 안보의 문제가 된다. 나아가 자원·환경의 양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장소적으로 특정적이다. 이에 따라 자원·환경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안보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적으로 풍족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대량의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간의 괴리는 자원안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환경자원의 이러한 절대적, 상대적 희소성은 그 자체로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근거를 둔 환경안보의 개념이나 담론은 몇가지 측면에서 반론이나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 (예로, Haas, 2002 참조). 이러한 비판의 초점은 희소성에 근거한 환경안보의 개념이 환경을 물질주의적 사고로 이해하고 그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의 희소성을 안보와 관련시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담론은 근대화와 더불어 확대”되어 왔지만, 실제 “자원의 희소성은 정치가 또는 정책입안자들의 고안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aas, 2002). 특히 자원문제로 전쟁이 유발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원의 희소성은 침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기 보다는 간접적 변수이다. 즉 자원의 희소성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 정치적 상황이 희소성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점이 지적될 수 있다⁷⁾.

환경안보의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환경퇴락이나 환경위협에 의한 환경안보의 대상은 3가지 측면 즉 사회구조, 자연 생태계, 그리고 이들 양자를 결합한 복지 등으로 제시된다

(Ney, 1999). 첫 번째 측면에서, 환경안보를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환경 퇴락을 사회·정치적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로, Homer-Dixon(1994)에 의하면, 환경 퇴락은 사회정치적 체계가 의존하고 있는 물질적 기반을 붕괴시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치적 조건들은 집단(계층이나 지역)들 간 맹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희소성을 야기하게 된다. 이 점에서 그는 환경안보라는 용어 대신에 환경결핍(또는 환경적 희소성)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의 주장은 안보에 관한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개념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Ney, 1999).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생가능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환경안보를 사회정치적 체계의 문제로 간주하며, ‘올바른’ 사회적 조건(예로, 자원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사회적 자본의 부족 또는 인종적 갈등의 해소)을 증시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일군의 다른 학자들은 생물학적 절박성에 기초하여 안보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 퇴락은 생명유지 생태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태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환경안보라는 용어 대신에 생태안보(ecological security)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Mische, 1989). Pirages(1997, 37)에 의하면, 생태안보란 “적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능가하여 다른 유형의 생태적 및 경제적 도전으로부터 안전 보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후자]의 위협은 다른 종들(메뚜기 떼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의 공격, 자연에 의한 재분배(홍수, 가뭄 및 기아를 포함하여), 그리고 생태계와의 부조화로 인한 경제적 실패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생태안보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생태주의적 사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은 생태계 그 자체의 보존 보다는 인간 존재에 우선된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생태안보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그 자연적 재고(stock)를 감소시킴 없이 주민들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안정적인 거시사회적 과정들(예로 사회정치적, 경제적 또는 심지어 군사적 체계)의 함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미시적 단계에서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외에도 일부 학자들은 보다 포괄적으로 환경안보를 사회정치적 및 생물적 요인 양자 모두를 강조하는 인간 복지의 개념과 연계시키고 있다. 예로, Myers(1993, Ney 1999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환경안보란 “인류 복지에 해당된다. 단지 유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 물, 식량, 주거, 보건, 고용 그리고 여타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타 기본필수품에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적 필요의 집합체 - 전반적인 안전과 삶의 질 - 가 국가의 안보관에 탁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즉 안보란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이들은 안보를 개별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생태적 복지와 관련된 총괄적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적 안보’(human security)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환경안보 개념에 대한 재검토는 결국 환경안보란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 양자를 모두 포함하며, 또한 인간사회에서 개별 인간행위의 차원과 사회구조의 차원 양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환경안보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환경퇴락이나 환경위협이 어느 정도 상황에서 환경안보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자연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원인이 불확정적인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자연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과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불분명함으로써, 환경안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들은 특정 장소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어 국가적, 국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지만,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위협적 요인이 되는가, 그리고 인접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위협적 영향을 미쳐 환경안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는 점에서 환경안보 개념의 또 다른 모호성이 제기된다.

사실 1980년대 후반 안보 측면에서 환경문제가 부각된 이후, 환경안보에 관한 논의는 환경퇴락과 환경자원의 희소성은 근본적인 물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대부분 실제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이들이 위협적 요인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환경과 안보를 연결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독특한 방법이나 기준들을 제시했다 (표 2 참조). 예로, Maddock(1995)에 의하면, 환경안보는 환경문제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며 지속적인 경우, 생태적 가치와 여타 중요한 가치들의 달성간 실제 병존불가능성이 높은 경우, 갈등하는 목적들 간 수용가능한 상호대체(trade-off)를 달성하기 위한 화폐적 및 실질적 비용이 크고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내 사회적 교란을 유도하는 구조적 또는 정치적 약점과 관련된 경우 등에서 명시적으로

표 2. 환경안보가 가시적으로 고려되는 상황 설정의 사례

Maddock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며 지속적인 경우, - 생태적 가치와 여타 중요한 가치들의 달성간 실제 병존불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갈등하는 목적들 간 수용가능한 trade-off를 달성하기 위한 화폐적 및 실질적 비용이 크고 증가하는 경우, - 국가 내 사회적 교란을 유도하는 구조적 또는 정치적 약점과 관련된 경우.
Haque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퇴락과 자원의 희소성이 내적으로 사회적 폭동이나 시민 분쟁을 유발, - 내적으로 환경적 부절서가 인접국들에 영향을 미쳐서 외적 갈등과 전쟁을 초래, - 환경적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이 전반적인 지역적 평화를 개선
Lee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환경적 희소성 - 전쟁의 수행이나 전쟁 준비에 의해 초래된 환경적 퇴락 -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서 환경적 퇴락 - 주권을 침해하는 환경적 퇴락

부각된다. 즉, 환경안보는 특정 환경문제 그 자체의 속성, 가치들 간의 갈등, 해결 비용의 부담 능력, 해결 또는 통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안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4가지 기준은 나름대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3. 환경안보, 환경레짐, 환경거버넌스

1)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환경레짐

환경안보의 개념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자원환경문제를 광범위하게 국제적, 세계적 갈등과 위협을 초래하는 안보문제로 인식하는데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대를 포함하여 환경과 안보 간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사실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안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된다. 즉, 1990년대의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며, 따라서 군사적 해결과 국가에 기초한 안보의 차원에서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안보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더 첨예하게 하거나 또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환경안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국제 자원·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보다 오히려 대립의 잠재적 가능성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전쟁의 발생가능성을 우려하도록 한다.

보다 최근 안보에 관한 논의에서, 전자의 제안은 보다 포괄적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예로 환경레짐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후자의 입장은 환경문제와 환경안보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예로 환경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방법이나 개념을 강조하는 주장들과 연결된다. 환경안보와 관련된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접근방법들은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겠지만⁸⁾, 여기서는 크게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비판적 정치경제학적

각각 기초한 접근방법으로 대별하여 이들의 구체적 주장들을 고찰하고자 한다⁹⁾. 이러한 고찰은 기존의 안보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안보 개념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환경문제와 안보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이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안보에 관한 이러한 논쟁적 주장들의 고찰과정에서 보면, 환경안보란 현실 세계의 환경퇴락과 환경적 위협의 심화로 제기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회정치적 고안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환경안보의 개념화 또는 이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 개념은 일단 전통적 안보개념의 비판에서 출발한다. 즉, 현대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차원을 능가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퇴락과 환경적 위협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안보 개념은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강조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론으로 이어진다. 국제정치 일반에서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주권을 국경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행위자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정치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반면 개방체제 하에서 시장메커니즘 및 세계적 기구들(예로,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초국적기업들)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국제환경안보에 관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기존의 전통적 안보 개념, 즉 주권을 '권위적 결정 - 최종적으로는 전쟁의 결정 - 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것이다 (Thomson, 1995; Paterson, 1996). 즉 국가가 주권자라는 가정 하에서 국가중심적 국제관계론을 구축하고자 한 현실주의는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또는 자유주의적 상호의존론)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후자에 의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성, 전지구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민주정치 등으로 인해서 국가 주권은 침식되었고, 국가가 더 이상 국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결국 국가는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적 및 세계적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상률, 1998).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견해에 대해 이른바 신현실주의적 반론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권력 또는 국가이익의 반영일 뿐이고, 국가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초국적 자본, 사람, 기술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입장 간 대립과 논쟁에서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 양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¹⁰⁾.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관한 전통적 견해, 즉 오늘날 세계화과정에서 다원화된 행위자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국민국가를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정치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주권이 침식되는 것인지 또는 중앙국가로부터 국민에게로 이동하는 것인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정상률, 1998). 이러한 혼란의 이유는 (신)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를 단순히 기존의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Thomson, 1995, 217). 특히 신자유주의는 비록 세계적 변화과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행위 주체들을 설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화 과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심지어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국제환경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환경레짐(environmental regime)의 개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 퇴락의 해결 또는 환경위협을 해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은 주권 국가들 간 협력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 환경정치에서 주권국가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는 우선 환경레짐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레짐(regime)은 국제 환경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한 환경기

준의 설정과 그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이며, 지구적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간 상호연계망의 의미로 이해된다 (전형권, 1999, 15). 환경레짐의 필요성은 생태계는 복잡하게 상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들은 비록 각기 분리된 자국 영토내 독립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이들로 구성된 하나의 국제정치체계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 환경학자들은 국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주권을 효과적인 국제환경정책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를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방안이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담론과 협상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체계 하에서의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률, 1998).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도의 협력과 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환경레짐의 설정이 강조되게 되었다. 즉 국제환경레짐론자들은 국제기구나 국제협약 등에서 국제환경레짐을 초국가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로 보고, 이들이 국가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독립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들은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들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입장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초국가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경근, 1998). 이러한 환경레짐을 강조하는 접근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논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기대하는 국제협력(즉 국가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립적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유도된 국제 환경협력)의 가능성과는 달리, 환경레짐론자들은 기존의 국가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힘의 구조를 전제로 서서히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환경레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국가간 협력의 양상도 레짐이론에서 추구하는 국가간 이익과 기대의 조화라는 이상적 형태가 아니라 일부 유력국가에 의해 편향적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천정웅, 1995, 258-259; 전형권, 1999, 15-16).

요컨대 환경안보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환경레짐론은 사실 오늘날 환경위기에 대한 전지구적 관리가 개별 국민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배제

된 상태에서 시장메커니즘과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제환경관리는 여전히 각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상이나 협약은 순수하게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지구의 환경용량과 자원을 계속 지배하려는 전략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지구환경문제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을 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과 환경기술 수준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상품 교역이나 심지어 자원 이용 및 상품 생산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병두, 1995). 이러한 점에서 국제환경문제는 순수한 국제환경레짐을 벗어나서 자본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 또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정치경제학적 환경안보와 환경거버넌스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개인들의 자구적 노력이나 또는 순수한 국제환경협약의 어느 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오늘날 환경문제의 기본 원인은 현대 자본주의사회를 규정하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기인한다. 즉, “환경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은 사회제도와 경제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나아가 국제체제에서 주권국가의 권력의 분배 향방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결여한 어떤 논의들도 학문적인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전형근, 1999).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국제 환경문제에 접근한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안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을 능가하는 세계적 경제·정치기구들의 활동이 탁월해 졌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 내에서 지역에 근거를 둔 시민사회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좁은 의미의 정치경제학(즉 맑스주의 방법론)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국제환경문제가 유발되는 정치경제적 배경이나 의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레짐이라는 용어 이후 등장한 개념이 환경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란 주권적 권위체(즉 정부, government)에서 유래하는 통치양식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에 의하여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거버넌스’란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환경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환경거버넌스란 환경적 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한정지우는 제도적 편제의 수립, 재설정 또는 변화를 통한 환경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행은 환경적 변화나 자원이용에 의해 초래되는 갈등의 해소에 초점을 둔다. 물론 여기서 ‘환경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가지게 된다. 만약 환경을 좁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국제환경거버넌스란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과 직접 명시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실천을 의미하게 된다. 즉, 국제환경거버넌스란 인간사회가 자원을 이용 및 분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또는 생태계를 혼란시키는 방법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국제환경거버넌스란 환경문제가 유발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적 편제들과 실천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개념화는 환경안보 및 환경레짐이라는 용어들이 가지는 한계를 해소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또는 세계)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 간의 차이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 예로, UN 체계와 같은 제도적 편제에 초점을 둔 세계환경거버넌스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이나 각료회의와 같은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 기존의 세계기구들에 초점을 두으로써 이들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기업, WTO, G7, 세계적 표준화, 세계경제포럼 등 공적 및 사적 조직들의 혼합으로 자본과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환경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촉진을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요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즉 WTO, 세계은행 등에 의해 추동되는 세계화 과정에 직접 저항하는 다양한 NGO들이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가 구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대항적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따라 세계환경거버넌스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두가지 현상들, 즉 한편으로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추구,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본과 권력 집중에 대한 저항의 산물로 이해된다 (Lipschutz, 1999; Paehlke, 2001; Dryzek, 2001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국제환경문제의 발생과 이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제시되고 있는 세계(또는 국제)환경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세계환경거버넌스에 관한 가장 관련적인 설명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서 도출된다 (예로, Vogler, 2003). 즉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제시된 세계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은 국가중심주의의 가정과 결부될 필요 없이 다차원적 거버넌스의 유형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차원적 거버넌스는 세계적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환경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부각되면서 세계환경거버넌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환경레짐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합리적 선택'에 관한 가정보다도 더 체계적인 개념적 바탕을 제공한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설명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환경거버넌스에 관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간 레짐들의 합 또는 중첩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세계화 과정이 시장과 국가의 분석단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세계환경거버넌스는 환경

문제들에 관한 이러한 국가간 레짐들의 중첩적 네트워크들의 통합으로 이해된다 (Young, 1997; Haas, 1999; Vogler, 2000. 이들에 대한 비평으로 Kutting, 2000 참조). 이러한 국제환경레짐의 중층적 구조로서 세계환경거버넌스에 대한 강조는 환경레짐의 역할에 대한 지지 보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즉 "환경문제의 세계화라는 쟁점은 단순히 문제해결의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세계화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 또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전형권, 1999, 5-6). 그러나 비판적 입장에서 국제환경레짐을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접근은 '역전히 국민국가를 중심단위로 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국제환경레짐의 연장선상에서 세계환경거버넌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중층적 국제레짐으로 구축된 세계환경거버넌스 내에 내재된 갈등과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은 일단 국가간 과정으로 세계환경거버넌스를 정의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적 레짐이론과는 달리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한 보다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 이를 위치지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도적 편제들 간의 모순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함양하는 중심적 양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예로 삼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삼림보호레짐과 다른 한편으로 점점더 많은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간 모순이 강조된다 (Humphrey, 2003). 또 다른 연구사례로, 세계환경거버넌스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농업적 생명기술의 발달과 다른 한편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간의 모순적 관계로 이해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거버넌스에 의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급속한 개발 및 실제 생태계에 도입과 이러한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자원·환경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편제들(또는 이의 부제) 간 모순이 지적될 수 있다 (Newell, 2003). 이러한 세계환경거버넌스에 내재된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가간 관계는 점점더 초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하여 구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제 환경거버넌스들

추구하는 능력 역시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구축되게 됨에 따라 이들 간의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세계환경거버넌스의 모순적 양상은 그러나 보다 우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적 거버넌스는 세계환경거버넌스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자본주의는 점차 국가들에 의한 거버넌스와 무관하게 되어가고 있는 한편, '사적 거버넌스'(private governance)가 점차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Cashore, 2002; Gulbrandsen, 2004). 즉 기업들이 그들의 집합적 협의체들을 통해 규칙과 실행을 정한 이후, 모든 기업들과 심지어 국가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거버넌스가 촉진된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었던 민영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Clapp, 1998).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차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과 사적 거버넌스는 초국적기업들의 권력 증대를 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적 거버넌스는 환경NGO들과 암묵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환경운동단체들이 영토적 국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규칙을 협상하고 합의하게 됨에 따라, 세계환경거버넌스는 탈영토화되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탈영토화된 거버넌스의 개념은 세계화 자체의 개념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세계화는 특정한 공간(예로 국가적 영토)으로부터 경제적 과정이 점점더 분리되어 탈영토화된다고 간주되는 것처럼, 탈영토화된 거버넌스는 행위자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며, 현대 세계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정치적 조직에 있어 네트워크 형태의 탁월성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즉 사적 기업행위자와 사회운동은 국가나 전통적 기업들의 계층적 관계라기보다 이러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조직되며, 상호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환경 NGO들은 국가와 기업들의 거버넌스 관행에 쉽게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버넌스 과정을 아래로부터 인간 행위자들의 합의된 권력과 관

련시키고, 환경 NGO들을 새로운 조직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Ford, 2003). 이러한 대안적 거버넌스는 초국적기업들과 이들의 동맹자들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에 대항하는 네트워크 및 이의 실천운동으로 의의를 가지게 된다 (Humphreys, 2004).

이러한 대안적 세계환경거버넌스는 초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세계시민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즉 대안적 세계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개별 국가의 정치적 형태 즉 민주적 제도의 확립의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된다. 최근 환경과 민주주의의 간 관련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민주주의와 환경보전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환경(생태)운동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광범위한 참여망의 확립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란 바로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상호 필수적인 내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생태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안적 국제환경거버넌스는 개별 국가의 독점적 의사결정이나 초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들로 구성된 신자유주의적 국제환경제집이나 환경거버넌스와는 구분되며, 특히 환경보호 내지 자원관리를 이유로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차별을 강요하는 환경파시즘과는 대립된다. 국제환경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민주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부와 권력의 집중 및 환경 파괴라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들 간 그리고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간 공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4. 동북아 환경안보의 정치경제적 제검토

1) 동북아 환경안보의 현황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내재된 문제들과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안보의 위협적 요소로 부상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인구 및 영토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문물의 오랜 상호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경제권은 오늘날 세계경제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역사적 조건과 경제성장을 위한 공통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의 역사와 경제정치적 상황은 이 국가들간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갈등의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은 엄청난 인구수와 높은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최병두, 1995).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서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원과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는 매우 넓고 많은 자원들을 부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아직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지 않음 뿐만 아니라 발전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지만, 자원 특히 식량자원과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발전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기술과 자원 조달능력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현재 각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수준은 상당히 상이하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성비와 같이 한 국가의 환경오염은 인접 국가에 직접,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동해와 황해와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해양의 오염은 인접한 국가들의 공동된 관심사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자원 이용에 있어 점점더 심각한 경쟁적 관계에 빠져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내 환경문제의 심화로 인한 자국민들의 불만과 더불어 인접국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또한 월경적 환경문제와 공유환경의 오염

문제들의 심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자원·환경문제들은 이 지역 국가들 간 갈등과 긴장 관계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 지역의 국제 환경안보가 점차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김성수, 2001; 홍금우, 2002; 김현진 2003 등 참조)

그러나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국제환경안보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 지역 국가들은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 동북아시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동북아시아 협력 다이얼로그(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쓰리(ASEAN plus Three)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과 같은 지역적 국제기구나 회의체들 그리고 동북아환경협력과위급회의(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방한 기구들을 통해 지역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이나 회의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치적 상호협력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문제는 단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 왔다. 동북아 지역의 상호협력 관계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국가들 간 관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다자간 국제환경협약과 이에 기초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은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2) 전통적 안보 체계와 정치적 한계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를 위한 환경협력이 미흡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다¹¹⁾. 비판적 정치경제학 및 이에 기초한 국제환경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된 몇 가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이 지역 국가들은 상호 부정적 의식 속에서 전통적, 즉 군사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안보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국가들 간에는 식민지 지배/피지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상호 부정적 의식은 쉽게 제거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즉 일본의 군사 침략에

대한 역사와 기억, 그리고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는 인접국들 간에 상호 부정적 의식을 여전히 가지도록 한다.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 및 전범에 대한 처리와 사과는 아직도 이 지역의 주요 정치적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상황은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보수적인 안보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Haque, 2001; Akaha, 2002).

이러한 군사적 (즉 현실주의적) 안보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적으로 대치국면에 있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및 일본도 군사력의 증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예로 중국은 군대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래 매년 10% 정도의 방어비용을 증대시켜 왔으며, 일본은 지난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하여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어비 지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군사력과 무기의 양은 엄청나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그 자체로서 전통적 의미에서 군사주의적 안보관의 지배적 우월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사비 지출 증대에 따른 군사력 유지와 무기 증강은 일상생활에 이용되어야 할 환경자원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며, 방사능 폐기물의 배출 등과 같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막강한 힘, 즉 미국의 개입은 이 지역의 안보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자간 협상이나 협약보다는 개별 국가들 간 쌍무적 안보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과도 쌍무적 안보협약을 맺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개입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큰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중국과 대만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대립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정도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제력 성장은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

맹의 틀 속에서 군사적 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1년 9.11 참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에 일정하게 참여하면서 군사적 부활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 위협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 지목 받고 있다.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상호 군사적 대치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힘의 균형은 다자간 협력기구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경쟁적 분업 관계와 경제적 한계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한편으로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발전의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 및 기술 부문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을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신흥공업국들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국의 개방과 개혁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그 자체의 엄청난 시장과 자원을 갖추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점점더 많은 폐기물들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은 다소간의 시차는 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경험했거나 또는 현재에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 간 자원이용의 호혜성, 환경기술의 공유, 또는 자연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은 한편으로 이 지역 국가들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치열한 경쟁관계에 빠져들면서 국가간 협력보다는 상호 긴장과 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자원 및 인력에 기초한 급속한 경제성장, 자

국 시장의 팽창, 그리고 수출입의 확대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 국가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경제적 강국이며 또한 조만간 군사적으로도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을 위한 지역 국제기구들이 일정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에 표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부차적이고 부분적인 사안으로 다루는 정도이며, 환경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환경기구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비록 부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 이 국가들의 경제는 매우 긴밀한 기능적 관계를 유지·발달시켜 왔다. 즉 이 지역의 경제는 국가들 간 긴밀한 분업체계를 형성하면서 내적 연관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상위의 경제력과 높은 기술수준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된 기술과 생산은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하청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적 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자본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공급 및 시장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공공업 제품 및 보다 표준화된 상품들의 생산영역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면서, 한국과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최병두, 1995, 2003). 이러한 지역 경제관계를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흔히 '기러기 비상' 모형으로 알려진 지역적 분업체계가 이해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와 분업관계는 1970년대 이후 호황기에는 각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잉팽창 이후 불황기 또는 경제위기 상황에는 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미(또는 저) 발전한 국가로 노후된 산업과 생산설비의 이전을 동반한다. 이러한 노후 산업과 생산설비는 기본적으로 저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자원다소비형이며 오염물질다배출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전

한 국가에서 미발전한 국가로 공해산업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지역내 국가들 간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미발전한 국가들은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및 수자원의 이용 등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환경규제를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임금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환경문제는 선진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나아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의 내적 연계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각 국가의 경제와 사회·환경문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도록 했다. 이러한 점은 1997년 동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잘 나타났다. 동북아 지역경제는 한편으로 역내 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외 경제, 특히 미국경제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자본의 전략은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결과로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퇴락하고 환경정책도 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정부와 기업의 수입을 감소시켜서, 환경기초 시설 등의 하부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축소시키고 또한 환경감시나 환경기준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방안으로, 생산의 증대 및 해외자본의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그 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어 온 환경관련 정책들에 대한 탈규제 전략이 일반화되었다.

4)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의식적 한계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중심적 활동과 시민사회의 미성숙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이나 의식(특히 유

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국제경제 및 정치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또는 국가 내 하부지역 단위(예로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국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중심적 사회구성체와 시민사회의 미성숙은 총량적 (또는 발전주의적) 경제성장이나 군사적 안보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전한 환경의식과 적극적인 환경정책에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¹²⁾.

특히 정책입안가들의 환경의식 부재 또는 부족은 환경안보에 관한 지역적 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없거나 또는 선호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적 국제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도록 한다. 즉, APEC와 같은 국제기구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또한 두만강유역개발프로그램에 일본이 배제된 것처럼, 지역 협력기구의 구성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호배타적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 국가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들 간 다자간 환경협력을 요구하는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개별 국가들 간 쌍무적 관계로 환경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민족주의,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인하여, 인접국가들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력이나 기구의 편성을 추구할 생각이 없는 대신 쌍무적 안보체계의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 중심의 환경협력은 국제환경문제의 특성과 조응하지 않으며, 특히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은 환경 문제를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좁은 의미에 한정하면서 사후적 기술적 처리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환경문제, 즉 빈곤과 사회공간적 불평등, 군사비 지출 증대와 무기증강, 물질주의 또는 소비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해외투자와의 실제 환경적 측면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거나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도록 한다 (Haque, 2001), 예

로,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흔히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자원을 과잉 채취하거나 개발하도록 하는 반면, 남한이나 일본의 일부 부유 계층들은 환경적으로 위대한 상품들을 과잉 소비함으로써 자원의 고갈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부유 계층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문제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의 포괄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환경의식의 미흡과 이를 조건지우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은 이 지역 국가들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과도 관련된다. 즉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내 여러 문제들, 예로 경제적 침체, 불평등의 심화, 실업증대, 계급 및 지역간 갈등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인종적 갈등을 포함) 등을 안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으며, 남한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문제와 노조 파업, 그리고 지역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유발된 실업의 증대(1998-1999년 동안 1천명에서 1천6백만명으로 증가함), 소득 격차, 도시/농촌 격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갈등과 분리주의 운동(티벳, 무슬림 지역 등) 봉착해 있으며, 북한도 경제적 낙후상태와 상당한 빈곤을 겪고 있다. 각 국가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국내 사회문제들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한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국내 문제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민족주의, 외적 위협, 군사주의 등의 담론을 동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안보 체계 내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5) 동북아 환경안보의 전망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환경안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층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으로, 이 지역 국가들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성장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에 초점을 두고 힘관계를 노골적으로 또

는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공간적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한편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경제성장 및 군사력 증대에 대한 강한 추동, 다른 한편으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과 더불어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증진을 요구하는 환경안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순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인권과 복지 그리고 환경을 위한 새로운 안보에 대한 강조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각국의 경제가 상호경쟁을 기반으로 개방적 지역주의 속에서 역내 교역의 확대를 위한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경우, 환경협력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대안의 요구가 없다면, 이 지역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정치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세계적 경쟁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안보의 필요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재원의 부족과 기술적 및 규제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환경안보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고자 할 것이다. 환경안보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는 더 큰 모순적 상황을 유발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자원·환경문제로 인한 새로운 긴장과 대립관계가 증첩되면서, 지역 전체는 점점 더 큰 갈등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국제환경안보를 위한 협력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에도 최소한 가시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지역환경안보복합체' 이론과 같이 (Lee, 2002),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인, 2001). 우선,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동북아 지역의 협력은 직접적인 상호 연계나

통합보다는 상호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신뢰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우선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장을 보다 자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신뢰와 협력 관계의 구축은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정부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 증진되어야 한다. 즉 국가 중심적이며 경제 우선적인 국제협력 관계의 구축에서 나아가 다양한 집단들 간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의 설립은 목적의 명확성과 더불어 절차적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각 국가들의 시민사회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안보를 위한 이러한 단계적 발전과정은 물론 개별 국가들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첫째, 쌍무간 방어전략에 기초한 전통적인 안보전략의 틀을 제검토하여, 군사주의의 탈피와 군비축소 및 무기감축을 위한 안보체계의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세계화에 우선적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성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구압의 완화와 빈곤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 중심의 사회구성에서 벗어나서 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숙과 순수한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의 충족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로 하여금 앞의 세 가지 사항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중심적 사회구성으로 인해 억제되어 왔다.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희성 외, 2000), 이러한 활동은 단지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강화됨에 따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참여를 명분으로 반환경적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상호협력을 전제로 기업의 환경과파괴적 활동에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옹호하는 사례들(아직 사적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는 국가와 기업의 활동에 일정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이들의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에 내제된 모순적 관계들을 지적하고 국가나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순적 관계를 극복하거나 또는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봉착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잠재력은 결국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게 된다. 즉, 시민사회는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며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촉진하고 생태적으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대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추동자가 될 수 있었다(김성수, 2001 등 참조)¹³⁾.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숙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부각과 이행에 가장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 (Zarsky and Tay, 2000). 시민사회의 성숙은 보다 개방/폐쇄적 경제체제를 운영할 것인가, 보다 권위적/민주적 정치문화를 택할 것인가를 좌우하게 되며, 또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향방을 결정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오늘날 절대적으로 한정된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화는 개별 국가내, 국가간,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불가능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화로 인해 국가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환경안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안보는 냉전체제 하에서 성립한 안보의 개념, 즉 단순히 물신화된 국가 주권 및 영토의 군사적 침략과 이에 대한 대항 또는 방어의 개

념으로 이해되기보다, 국민들의 생존과 생활이 폭력적 수단 외의 다른 수단들에 의해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현실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확산되고 있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은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비군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환경안보에 대한 강조와 개념의 확산이 환경안보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로 환경안보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제시된 국제환경레짐이나 환경거버넌스는 암묵적으로 선진강대국들과 초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 환경문제의 자유주의적 해결방안은 결국 환경위기를 명분으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생태학적 전체주의로 빠지거나 또는 약소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자원·환경 주권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는 환경파시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기능의 상대적 약화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적 국제기구들이나 초국적기업과 같은 세계적 행위자들의 역할 증대에 조응하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의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실제 국제정치에서 여전히 개별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가간 환경레짐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레짐의 개념은 국가중심적 안보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의 다원적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개념적으로 기초한 환경거버넌스가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개념 역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해 이해되거나 또는 이른바 '사적'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탈영토화된 사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왜곡시키면서 자신과의 연대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국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환경문제의 심화를 초래한 정치경제적 분석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재구성은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북아시아는 국가중심의 국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의 권력의 변화는 이 지역의 안정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통합은 고사하고 국제적 협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역 국가들 간에는 경제력 및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되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증대를 시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그 자체의 엄청난 시장과 자원을 갖추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을 이룩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조만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초강대국화는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긴장관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위협의 고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바로 환경안보를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를 위한 노력은 상호신뢰체계의 구축,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그리고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과 최종적인 통합에 관한 논의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안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개별 국가들 내에서 국내적으로 군사주의의 탈피와 군비축소,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의 포기,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순수한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시민사회의 성숙과 활성화는 다른 전제 조건들의 실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註

1) 세계(또는 국제)환경안보의 개념과 이론 둘러싼 논의들에 관하여, 최병두(1995), 정상률(1998), 전형근(1999), Dalby(1996), Homer-Dixon(1999), Ney(1999) 등 참조.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최병두(1995) 이후 전개된 환경안보에 관한 문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최근의 논쟁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 인용된 문헌 참조.

- 2)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안보의 개념은 생태·환경적 조화와 관련된 환경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및 민주화와 관련된 새로운 정치적 안보, 그리고 경제적 경쟁의 극복 및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안보 등이 이산화될 수 있다. 최병두(1995) 참조.
- 3) 미국에 의해 자행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은 9/11 참사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전형적으로 한편으로 이라크의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와 인권 해방을 명분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석유자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최병두, 2002 및 Harvey, 2003 등 참조.
- 4) 이러한 점에서 자원 환경문제와 안보에 관하여 오래된(정치)지리학적 연구로 Barnett(1958)를, 또한 지난 198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에 관하여서는 Dalby(1992) 등 참조.
- 5) 그러나 이 이론(또는 개념)은 "세계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전략"(Lee, 2002)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가진다.
- 6) 특히 Homer-Dixon(1999, 48)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환경적으로 취약한 한계상황으로 몰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생태적 한계화'(ecological marginalization)라고 칭한다.
- 7) 예로,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독재정권에 의한 석유자원의 통제가 세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안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주엘라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환경적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물질적 희소성을 명분으로 미국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8) 예로, Haque(2001, 206-212)는 환경안보와 관련하여 국제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다: 현실주의적 전통(고전적 현실주의론, 신현실주의론, 권력균형론, 헤게모니적 안정화 이론 등); 2) 자유주의적 전통(고전적 자유론, 다원주의, 신자유주의 등); 해석적 전통(상이한 견해들의 구성주의); 그리고 급진적 전통(비판적,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적 이론들 포함).
- 9) 자유주의적 접근(그리고 중상주의적 접근)과 비교하여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이에 근거하여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을 둘러싼 갈등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이채문(2004) 참조.
- 10) Thomson(1995)은 현실주의와 상호의존론 모두 주권을 논하는데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의 국가 주권에 대한 단선적 이해는 '주권의 국제적 차원'을 강조하는 Giddens의 '비현실주의적 초주권이론'(non-realist proto-theory of sovereignty)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Paterson(1996, 59-76)은 기후변화협약을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논한 후 신자유

- 주의적 제도주의가 기후변화협약을 설명하는데 더 적실성 있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를 강조하는 국제정치학자들(예로, Waltz, Keohane 등)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김영호(1997) 참조.
- 11) 예로 Akaha(2002)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다자간 협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의 지적하고, 이의 이유로 ① 역사의 기억, 화해와 협력의 정신 보다는 증오와 의심, ② 이 지역의 강대국들 간 관계의 급변, ③ 지역적 권력 구조의 복잡성, ④ 국가의 권력이 시민사회 기구들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⑤ 이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 12) 예로, 해양환경협력분야(NOWPAP)에서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환경오염을 쟁점화하고 교섭단계에서 각국 정부의 '국익'을 재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위행위주체(sub-national actor), 즉 전문가 집단, 환경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김현진, 2003).
 - 13) 동북아 지역 국제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시민환경운동의 중요성에서 특히 여성환경운동의 역할과 한계에 관하여 권경희(2000) 참조.

文獻

권경희, 2000, "에코페미니즘의 역할과 한계성 -동북아 국제환경이슈와 여성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6(1), 189-205.

김성수, 2001, "한국, 중국, 일본의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11(2), 213-234.

김영호, 1997, "신현실주의의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37(2), 3-22.

김정인, 2001, "동북아 환경협력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한 연구," 동북아연구(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편), 15, 77-95.

김현진, 2003, "동북아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 -NOWPAP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11(3).

이채문, 2004,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110-131.

전형근, 1999, "환경문제의 세계화와 정치적 성격," 한국동북아논총, 13, 73-93.

정상률, 1998,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안보적 시각 -환경안보 담론(주권·공동체)을 중심으로-", 1998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

회 발표문.

정희성 · 김용우 · 안형기 · 김성윤 · 이기환, 2000, "동북아 3국 환경NGO의 실태분석 국제적 연대방안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9(1), 343-367.

조경근, 1998, "지구환경쟁점의 정치적 구조와 한국의 과제," 환경과 정치 (한국정치학회 환경문제특별학술회의 자료집), 1-8.

천정웅, 1995,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한울.

최병두, 1995,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최병두, 2003, "동아시아의 경제·환경문제와 초국경적 대응," 계간 사상 (겨울호), 156-180.

홍금우, 2002,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1), 23-39.

Akaha, T., 2002,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and Prospec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on *Thinking Outside the Security Box: Non-traditional Security in Asia: Governance, Glob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United Nations University Seminar, New York, March 15, 2002.

Barnett, H.J., 1958, The changing relation of natural resources to national security, *Economic Geography*, 34, 188-201.

Cashore, B., 2002, Legitimacy and the privatiz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how non-state market-driven (NSMD) governance systems gain rule-making authority, *Governance*, 15(4), 503-530.

Clapp, J., 1998, The privatiz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SO 14000 and the developing world, *Global Governance*, 4(3), 295-316.

Dalby, S., 1992, Ecopolitical discourse: 'environmental security' and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4), 503-522.

Dalby, S., 1996, Environmental security: geopolitics, ecology and the new world order, in Braden, J., et al.(eds.), *Environmental Policy with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Edward Elgar,

- Cheltenham.
- Deudney, D., 1990, The case against link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national security, *Millennium*, 19(3), 461-476.
- Deudney, D., 1997, The limits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Sheldon Kamieniecki *et al.* (eds.), *Flashpoints in Environmental Policymaking*, SUNY Press, Albany, NY.
- Dryzek, J., 2001, Resistance is fertil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1), 11-17.
- Dupont, A., 1998, *The Environment and Security in Pacific Asia*, Adelphi 319,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Dyer, H. C., 1996, Environmental security as a universal valu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heory, in Vogler, J., and Imber, M. F. (eds.),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London.
- Ford, L. H., 2003, Challeng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ocial movement agency and global civil societ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3(2), 120-134.
- Gulbrandsen, L.H., 2004, Overlapping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can forest certification fill the gaps in the global forest regim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2004(2), 75-99.
- Haas, P. M., 1999,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Aseem Prakash and Jeffrey Hart (eds.),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Routledge, London, 103-133.
- Haas, P. M., 2002, Constructing environmental conflicts from resource scarcit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2(1), 1-11.
- Haque, M. S., 2001, Environmental security in East Asia: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4(4), 203-234.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 Press, Oxford.
- Homer-Dixon, T., 1994, Environmental scarcities and violent conflict: evidence from the cases, *International Security*, 19(1), 5-40.
- Homer-Dixon, T., 1999, *Environment, Scarcity and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mphreys, D., 2003, Life protective or carcinogenic challenge? Global forests governance under advanced capitalism,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3(2), 40-56.
- _____, 2004, Redefining the issues: NGO influence on international forest negotiation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4(2), 51-75.
- Imber, M. F., 1994, *Environment, Security and UN Reform*, St. Martin's Press, New York.
- Kutting, G., 2000, *Environment,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London.
- Lee, G., 2002, Regional environmental security complex approach to environmental security in East Asia, UNU Seminar on *Thinking Outside the Security Box: Non-traditional Security in Asia: Governance, Glob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15, March, 2002).
- Lipschutz, R. D., 1999, From local knowledge and practice to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M. Hewson and T. J. Sinclair, (eds.),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Theory*, State Univ. of New York, Albany, 259-283.
- Litfin, K. T., 1999, Constructing environmental security and ecological interdependence, *Global Governance*, 5(3), 359-377.
- Maddock, R. T. 1995, Environmental security in 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7(1), 20-37.
- Mische, P. M., 1989, Ecological security and the need to reconceptualise sovereignty, *Alternatives*, 14, 389-427.
- Myers, N., 1993, Populati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3), 205-216.
- Newell, P., 2001, New environmental architectures and the search for effectivenes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1), 35-44.
- Newell, P., 2003, Globalization and the governance of biotechnolog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3(2), 56-71.
- Ney, S., 1999, Environmental security: a critical

- overview, *Innovation*, 12(1), 7-24.
- Paehlke, R., 2001, Environment, equity and globalization: beyond resistanc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1), 1-10.
- Paterson, M., 1996, IR theory: neorealism, neoinstitutionalism and climate change convention, Vogler, J. and Imber, M.F. (eds.),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 Paterson, M., Humphreys, D., and Pettiford, L., 2003, Conceptualiz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from interstate regimes to counter-hegemonic struggle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3(2), 1-10.
- Pirages, D., 1997, Demographic change and ecological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 and Security Centre Report*, Issue 3, 5-14 (Ney, S., 1999에서 재인용).
- Thomson, J. E., 1995, State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9(2), 213-233.
- Vogler, J., 2000, *The Global Commons: A Regime Analysis*, (2nd ed.), Wiley, London.
- Young, O. R. (ed.), 1997, *Global Governance: Drawing Insights from the Environmental Experience*, Cornell U.P. Ithaca.
- Zarsky, L. and Tay, S. C., 2001, Civil society and the fut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Asia, in Angel D. and Rock M. (eds.), *Asia's Clean Revolution: Industry Growth and the Environment*, Greenleaf Publishing, Sheffield.

최초투고일 04. 11. 25

최종접수일 04. 12. 18

교신 : 최병두,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이메일: bdchoi@daegu.ac.kr, 전화: 053-650-8155,
팩스: 053-650-8151)

Correspondence: Choi, Byung-Doo,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isty(bdchoi@daegu.
ac.kr, phone: 053-650-8155, fax: 053-650-8151)